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Right to Health News at a Glance

2013년 7월 3주차(2013.07.19-07.22)

요약(Summary)

○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7/18)

- 박 대통령 “지방 공공병원 적자, 정부가 지원해야”(7/18)
- 정부, 의료취약지에 원격의료 등 u헬스 인프라 구축(7/19)
- 의료취약지 의무적 근무 ‘공공의사 양성’ 제도 추진(7/22)

○ 기타 뉴스

- 서울시, 공공성 높은 민간병원에 의료장비·인력 지원(7/21)
- 인권위 “진주의료원 퇴원·전원 강요는 인권침해”(7/22)
- 진영 장관, “보호자나 간병인이 없어도 되는 병원 만들겠다”(7/22)
- 의협, 선택분업 추진 모색(7/19)
- 치료용 제약 한시적 급여 논의 내달부터 본격화될 듯(7/20)
- 보건복지부,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발표(7/21)
- US뉴스&월드리포트, ‘2013~14년도’ 최고병원 평가 결과 발표(7/18)
- 영국 ‘국영혈액원’ 미국 사모펀드에 매각돼(7/20)
- 성폭력 피해자 인공유산 국가지원 증가(7/22)
-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진주의료원 폐업과 공공치과의료’ 발행(7/22)

1.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7/18)

(1) 박 대통령 “지방 공공병원 적자, 정부가 지원해야”(7/18)

지난호 ‘한 눈으로 보는 건강권 뉴스’ 참고

(2) 정부, 의료취약지에 원격의료 등 u헬스 인프라 구축(7/19)

지역발전정책 방향의 하나로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여기에는 원격의료 확산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민감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 지난 18일 첫 회의를 열고 취약지역 공공의료체계 정비사업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지역정책 로드맵인 셈이다.

이번에 마련된 방안에 따르면 의료취약지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의료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각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원격의료의 확산을 위해 u-Health 인프라를 구축해 만성질환 관리, 보건교육 등 종합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빈곤,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 가구별로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직접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취약지역 응급 의료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야간·공휴일 응급 수술이 가능하도록 119 구급대와 응급의료센터간 핫라인을 운영하기로 했다. 원격응급의료시스템을 구비한 해양경찰청 함정, 헬기 배치를 늘려 낙도지역 응급환자 구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¹⁾

(3) 의료취약지 의무적 근무 ‘공공의사 양성’ 제도 추진(7/22)

정부가 의료취약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18일 열린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는 ‘지역희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 거점병원을 육성하고, 의료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하는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를 선정했다.

지역발전위는 각 정부부처의 지역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각 부처장관이 당연직위원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위촉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 선정된 과제 중에서 의료분야의 경우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취약지를 선정하고, 지역거점병원과 의료인력 양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담겼다. 특히 공공의료인력을 배출해 취약지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역발전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이라며 “복지부에서 공공의료인력 양성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와 공공의료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의대 졸업 후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전제로 하는 ‘의대 정원 외 입학’ 등 다양한 인력 양성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접착되고 있는 공공의사 양성 방안은 의대를 신설하거나 퇴출이 거의 확정적인 서남의대 입학정원(49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실제로 공주대와 목포대 등 지방사립대들은 지역 1차의료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의대 유치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의대 신설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 대학정책과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가져오려는 몇몇 대학들은 너무 앞서나가는 것 같다”며 “의사 수가 많은 가운데 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공공의사를 배출하기 위한 의대 신설 보다는 의대 정원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박형근 교수는 “부실 의대 정리를 통해 확보된 의대 정원을 공공 병원과 공중보건에 일정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 의과대학(혹은 공공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방식과 연계하는 구상도 가능할 것”라고 제안했다.

한편 시민단체 등에서는 여전히 공공의대 신설을 주장하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 시립대 등에 공공의대를 신설해 공공의사 인력을 정기적으로 배출하는 이른바 ‘국공립근무 의료인 양성제도(가칭)’를 제안했다. 이 방안은 서울시립대학이나 일산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병원을 운영하는 국방부, 경찰병원을 운영하는 경찰청, 보훈병원을 운영하는 한국보훈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군의관, 경찰공의 등 공공의료인을 양성토록 하자는 것이다.²⁾

국내 정책

1. 서울시, 공공성 높은 민간병원에 의료장비·인력 지원(7/21)

서울시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성이 높은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장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마리아수녀회 도티기념병원, 성가소비녀회 성가복지병원, 다일복지재단 다일천사병원, 지구촌사랑나눔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카톨릭사회복지재단 요셉의원 등 5개 비영리 병원을 ‘안전망병원’으로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전망병원은 기존에도 저소득층, 노숙인, 외국인 등 주변의 의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해 왔지만 수술이나 고가의 검사 등 전문적인 치료에 한계가 있는 공공성이 높은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지정했다. 안전망병원으로 지정된 5개 병원은 작년 한 해에만 저소득층, 노숙인, 외국인 등 약 13만8,552명을 대상으로 외래·입원진료, 수술, 검사를 실시하는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지원을 했다.

실제로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한 도티기념병원은 1982년 6월 설립된 이래 30년간 외국인노동자나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해왔다. 작년까지 이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는 196만여명에 달하고, 수술 건수만 4만여건에 이른다.

시는 5개 안전망병원에 장비, 인력 등을 지원함으로써 민간병원에서 수행하는 공공의료의 질을 끌어올려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시립병원뿐만이 아닌 안전망병원에서도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면 안전망병원을 찾은 시민이 보다 세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비구입부터 검사 등 고가가 드는 MRI, CT 촬영 및 판독은 서북병원, 은평병원이 지원하는 진료협업을 실시한다.

안전망병원이 치료할 수 없는 영역의 수술, 응급처치 환자 및 알콜 행려환자는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은평병원에서 담당해 중단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서울시 방문간호사 인력도 파견해 부족한 전문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전망병원 운영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야간 앰블런스 이용을 지원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에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시민체감 공공의료 강화계획’의 일환으로, 시는 공공성이 높은 민간병원과 연계·협력을 통해 공공병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의료사각계층에 대한 보다 꼼꼼한 의료안전망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민간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확대

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시민 누구나 보호받는 의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서울시립병원이 서울 공공의료의 뿌리이자 기둥이라면 안전망병원은 그 줄기로서 공공의료의 역할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³⁾

2. 인권위 "진주의료원 퇴원·전원 강요는 인권침해(7/22)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주의료원 환자들이 '퇴원을 강요받아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진정과 관련,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환자들에게 퇴원과 전원(轉院)을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또 이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의료부문 정책 전반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2일 오후 비공개로 전원위원회를 열어 1시간 30분 동안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원 10명 중 6명이 인권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3월 도청 공무원들의 퇴원·전원 강요로 환자들의 건강권·의료접근권이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공무원의 퇴원·전원 강요로 인한 진주의료원 환자 인권침해' 진정안에 대해 지난달 26일 첫 전원위를 열었다. 당시 전원위는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환자들에게 퇴원을 강요했다는 진정 내용을 판단할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며 보완 조사를 요청해 의결이 연기됐다.

담당 조사관들의 보완 조사 후 두 번째 전원위가 지난 8일 열렸으나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인권위가 뒤늦게라도 환자들의 강제 전원을 인권침해로 인정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다"며 "홍준표 도지사가 강제성 부분을 계속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명확하게 사실을 밝히고 퇴원 당한 환자들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정이 너무 늦게 나왔다"며 "권고가 실효성을 띠려면 병원의 공공성 문제에 관한 후속조치가 같이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다.⁴⁾

3. 진영 장관, "보호자나 간병인이 없어도 되는 병원 만들겠다"(7/22)

진영 장관은 7.22(월) 오후2시에 인하대 병원을 방문하여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간병문제에 대한 제도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진영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히 간병비를 지원해 주던 과거 시범사업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간호인력 확충, 전인 간호를 위한 간호팀제 도입 등 보호자 상주가 필요없는 환자 중심의 병원 운영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입원서비스의 근본적 혁신 모델을 만드는 시범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병동 입원환자를 위문하면서 진 장관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빈곤해 지는 일은 없도록 정부가 책임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간병문제는 충분한 시범사업을 거쳐 구체적 실시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여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는 병원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인하대 병원을 비롯한 13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최소 1년 이상의 시범사업 기간을 통해 보호자 상주가 필요 없는 입원서비스 제공 모델을 검증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서비스 근본적 개편과 아울러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과제"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증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보편적 제도화가 가능한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⁵⁾

1. 의협, 선택분업 추진 모색(7/19)

대한의사협회가 선택분업 카드를 또다시 꺼내들 모양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약국의 의약품 청구불일치 논란과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가 무산된 데 따른 대응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지난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조만간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벌일 것이다. 신뢰할수 있는 조사기관을 물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송 대변인은 "의약품 청구불일치 사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도 안하겠다고 한다"며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그렇다면 큰 틀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설문조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해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일차 목표다. 비록 조사방법이나 문항 등에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여론은 의약분업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이 의료계의 판단이다. 지난 2010년 전국 의사총연합이 의약분업 10년을 맞아 국민 1만2,2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의 60.3%가 병의원이 아닌 약국에서 약을 타는 것이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불편하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은 19%에 불과했다.

같은해 병원협회가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만약 본인이 조제료를 모두 지불한다고 가정한다면 의료기관 조제료와 약국 조제료가 똑같이 5,000원일 때 어디를 이용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73%가 의료기관이라고 응답했다.

송 대변인은 "결국 지금의 의약분업은 약사만 좋은 제도가 됐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된 것도 아니고 국민이 편한 것도 아닌데 왜 하느냐는 물음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환규 의협회장은 지난달 26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지난 13년간 유지됐던 의약분업 제도를 재고해 선택분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슈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⁶⁾

2. 치료용 처방 한시적 급여 논의 내달부터 본격화될 듯(7/20)

노인질환 등 치료용 처방에 건강보험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사전논의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19일 한의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협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지난해 건정심이 의결한 처방 한시적 급여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급여화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팀(TF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임장신 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한의사협회는 임 위원장을 중심으로 18일까지 TFT 구성을 마쳤으며, 오는 22일 공식 출범과 함께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의사협회는 이 회의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중 복지부에 시범사업 참여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의계 입장에서 건강보험이 주도하는 국내 의료체계에서 급여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더욱이 임상적 유용성 등이 입증되지 않은 처방에 급여를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이 추구하는 근거중심주의 정책에 반한다는 부정적 의견이 제기된 상황에서 얻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었다.

하지만 한방의료 전문물인 처방 급여사업을 약국과 함께 공유하는 데 대해 반발한 한의계 일각의

반대여론에 부딪쳐 이 사업은 7개월째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한 전문가는 "한의계가 굴러들어온 복을 차는 것"이라며 "만약 시범사업이 이해당사자간 협의 불발로 이렇게 계속 시행되지 못한다면 철회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분위기 탓일까. 한의사협회는 최근 대의원대회에서 표결 끝에 첩약 한시적 급여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직능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반대하는 의견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이번 대의원대회 결정은 장기적으로 한의계와 국민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TFT가 공식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에 참여의사를 공식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한의사협회가 참여의사를 밝혀오면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 과장은 "건정심 결정은 그대로 유효한 만큼 협의가 잘 이뤄지면 10월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한의사협회의 의중이 무엇인 지 몰라 지금 단계에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정심에서 의결된 여성, 노인질환 치료용 첩약 한시적 급여사업은 3년간 총 6000억원을 투입되는 적지 않은 규모의 사업이다. 당초 1차 년도 시범사업은 올해 10월로 예정돼 있었다.⁷⁾

약계 뉴스

1. 보건복지부,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발표(7/21)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2017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글로벌제약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5개년 종합계획은 2020년까지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위한 1단계로 '신약·신제품 개발을 통한 해외수출'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방안 관련 단계별 목표

제약산업 육성·지원 단계별 목표	
1단계 목표 (2012~2014년)	퍼스트제네릭, 바이오시밀러, 개량신약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기업 창출(5~6개)
2단계 목표 (2015~2017년)	바이오의약품, 맞춤형 신약 등 전문제약분야에서 글로벌 혁신기업 창출(6~8개)
3단계 목표 (2018~2020년)	블록버스터급 혁신신약 분야에서 글로벌 메이저 제약사 창출(2~3개)

전문 기업 육성 전략

기업유형	경쟁력	주력제품	벤치마킹사례
글로벌제네릭기업 (Global Generic Pharma)	범용의약품 품질, 가격 경쟁력	First 제네릭, 바이오 시밀러 등	Teva社(세계12위) * 제네릭 세계1위
전문제약기업 (Specialized Pharma)	틈새시장 특허기술개발	개량신약, 바이오 베타, 희귀의약품 등	Amgen(세계 13위) *희귀질환치료제 전문
글로벌 메이저 기업 (Global Major Pharma)	다빈도·만성질환 의약품 특허기술개발	블록버스터 신약, 표적 항암치료제 등	Pfizer(세계 1위) * 글로벌신약

자료 : 보건복지부
뉴스스 그래픽 : 윤정아 기자(yoonja@newsis.com)

NEWSIS ()

2017년까지 세계 10대 제약강국, 수출 11조 달성, 글로벌 신약 4개 창출을 목표로 ▲연구개발 확대를 통한 개방형 혁신 ▲제약-금융의 결합 ▲우수전문인력 양성 ▲전략적 수출 지원 ▲선진화된 인프라 구축 등 5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제약 연구개발과 글로벌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한다. 올해 정부에서 200억원의 종잣돈을 내어 10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 향후 5년간 5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

또한 신약 개발에서 산업계와 학계, 정부부처가 유기적으로 융합, 바이오시밀러와 줄기세포치료제 등 유망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에 집중한다.

그 외 제약산업 핵심 전문인력 1만명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대학원 운영, 해외 전문 인력 교육, 관련 자격증 국가자격화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 세부 시행 과제를 관리 점검해 종합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할 것"이라며 "민간 기업도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이해하고 경영혁신을 통해 신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에 과감히 투자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⁸⁾

기타 뉴스

1. US뉴스&월드리포트, '2013~14년도' 최고병원 평가 결과 발표(7/18)

'미국 최고의 병원'으로 존스홉킨스 대학병원이 선정됐다. US뉴스&월드리포트(U.S. News&World Report)가 최근 2013~14년도 미국 최고병원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24년 째인 US뉴스의 병원 평가는 1만명에 달하는 전문가 조사와 암, 비뇨기과 등 약 5000여개 병원의 환자 대비 의료진 수, 중환자 생존율 등에 관련된 데이터를 근거로 평가해 선정한 것이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존스홉킨스 의대병원이 종합평가에서 30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메사추세츠 종합병원과 메이요 클리닉이 각각 29점, 클리블랜드 클리닉이 27점으로 뒤를 이었다. 16개 질환 분야에서 순위를 보면 암 치료의 경우 텍사스대 부설 M.D 앤더슨이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메모리얼 슬론 캐더링 암센터와 메이요 클리닉이 2~3위에 랭크됐다.

(편집자주: 순위에 있는 모든 병원은 모두 비영리병원, UCLA Medical Center는 주립병원)

Rank	Hospital	Points	Specialties
1	Johns Hopkins Hospital, Baltimore	30	15
2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Boston	29	16
3	Mayo Clinic, Rochester, Minn.	29	15
4	Cleveland Clinic	27	14
5	UCLA Medical Center, Los Angeles	19	13
6	Northwestern Memorial Hospital, Chicago	17	12
7	New York-Presbyterian University Hospital of Columbia and Cornell, N.Y.	17	10
7	UCSF Medical Center, San Francisco	17	10
9	Brigham and Women's Hospital, Boston	16	10
10	UPMC-University of Pittsburgh Medical Center	15	10

2. 영국 '국영혈액원' 미국 사모펀드에 매각돼(7/20)

영국 정부가 국영 혈액사업을 미국 사모펀드에 매각해 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지난 18일자 기사를 통해 보건부가 최근 정부 소유의 '영국혈액원(PRUK)' 지분 80%를 미국의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에 2억3,000만 파운드에 매각했다고 보도했다. PRUK는 영국 NHS 산하 병원에 혈장 등 혈액제제 공급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지난해 1억1,000만 파운드의 매출 실적을 올렸지만 만성적인 적자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영국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에 따라 결국 민영화되는 셈이다.

PRUK의 지분 80%를 얻게 된 베인캐피탈은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밋 롬니가 공동설립한 사모펀드로, 공동소유인 미국 최대 영리병원 체인인 HCA를 통해 런던의 민영의료보험 시장 절반을 장악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PRUK를 미국 사모펀드에 매각해 민영화 한 것을 놓고 현지에서는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다. 전 영국 외무장관을 지낸 데이비드 오언 상원의원은 "1975년에도 민영화 논란이 있었지만 혈액 자급체제 유지를 위해 지원을 확대한 바 있다"며 "지금 이 나라가 다시 예전의 실수를 반복하려 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혈액 제제의 안전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덴 폴터 영국 보건담당 부장관은 "이번 계약으로 앞으로 영국 내 환자들이 더 높은 품질의 혈액 제제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베인캐피탈은 영국의 제약과 의료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⁹⁾

3. 성폭력 피해자 인공유산 국가지원 증가(7/22)

지난 2010년 '불법 낙태' 예방대책이 나온 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공유산 정부지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인공유산 지원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해바라기아동센터 등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111곳이 지난해 지원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110건 안팎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 2009년 24건에 견줘 4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성폭력상담소 등이 지원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2009년에 24건이던 것이, 2010년에 79건, 2011년에 66건, 2012년 상반기 55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과 인공유산에 관한 상담 사례도 2009년에 552건에서 2011년 689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상반기에만 364건을 기록했다.

인공유산에 대한 국가지원이 늘어난 것은 2010년에 사회적으로 낙태 근절 요구가 강하게 제기된 데 따른 영향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지난 2010년 당시 한 산부인과 의사단체가 '불법 낙태' 의사를 고발하며 정부에 근절대책을 촉구했고 정부는 이에 따라 신고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보고서 저자인 김미순 성폭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2010년부터 병원에서 성폭력피해 임증을 까다롭게 요구하거나, 피해여성이 지적장애인인 경우에도 수술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며 "인공유산이 어렵게 되면서 성폭력상담소의 임신과 인공유산 지원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력이 없는 10대 청소년 피해자의 인공유산 지원이 급증한 것도 이런 인공유산이 어려워진 사회적인 변화를 방증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인공유산 지원을 받은 13~19세 여성은 2009년에 16명, 2010년 34명, 2011년 41명이었고 지난해 상

반기에만 33명이었다.

200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인공유산 지원을 받은 여성 224명(건) 가운데 13~19세가 55%로 가장 많고 20~25세가 16%로 뒤를 이었다.

이번 보고서는 협의회가 지난해 전국 220개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발송한 설문지에 회신한 111개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다.¹⁰⁾

4.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진주의료원 폐업과 공공치과의료’ 발행(7/22)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 이하 정책연구소)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공공치과의료’를 주제로 한 ‘ISSUE REPORT 제2호’를 7월 22일(월)자로 발행한다고 밝혔다. 정책연구소에서 발행하는 ‘ISSUE REPORT 제2호’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현황과 장애인 치과의료 이용실태, 한국의 장애인 치과의료기관의 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다. 특히, 최근 공공의료기관의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됐던 진주의료원의 폐업 결정과 관련하여 진주의료원 폐업이 장애인 치과의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중점 조명했다.

또, 진주의료원 장애인 전문 치과 설치배경과 경과, 진주의료원 장애인 전문 치과의 현황, (진주의료원 폐업 전까지) 경상남도 장애인 전문 치과 확대 계획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돼 있다.

진주의료원은 경상남도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운영되어 온 공공의료기관중 한 곳으로 최근 만성적자를 이유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7월 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이번 ‘ISSUE REPORT’ 발행을 담당했던 정책연구소의 최용찬 연구원은 “진주의료원 장애인 전문 치과의 폐쇄는 경남지역에 하나밖에 없던 장애인 전문 치과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하루 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후 5개소로 확대하기로 계획했던 장애인 전문 치과 모두가 진주의료원의 폐쇄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우려했다.¹¹⁾

- 1) ‘정부, 의료취약지에 원격의료 등 u헬스 인프라 구축’, 2013.7.19., <라포르시안>
- 2) ‘의료취약지 근무 ‘공공의사 양성’ 박대통령 직접 챙긴다’, 2013.7.22., <라포르시안>
- 3) ‘서울시, 공공성 높은 민간병원에 의료장비·인력 지원’, 2013.7.21., <라포르시안>
- 4) ‘인권위 “진주의료원 퇴원·전원 강요는 인권침해”’, 2013.7.22., <연합뉴스>
- 5) ‘진영 장관, “보호자나 간병인이 없어도 되는 병원 만들겠다.”’, 2013.7.2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6) “현 의약분업 약사만 좋은 제도”...의협, 선택분업 추진 모색, 2013.7.19., <라포르시안>
- 7) ‘치료용 제약 한시적 급여 논의 내달부터 본격화될 듯’, 2013.7.20., <데일리팝>
- 8) ‘2017년까지 5천억원 제약육성 펀드 조성’, 2013.7.21., <뉴스시스>
- 9) ‘영국 ‘국영혈액원’ 미국 사모펀드에 매각돼’, 2013.7.20., <라포르시안>
- 10) “성폭력 피해자 인공유산 국가지원 증가”, 2013.7.22., <연합뉴스>
- 11) ‘치협, ‘진주의료원 폐업과 장애인 치과’ 조명’, 2013.7.22., <헬스코리아>